

새만금 관할권 분쟁 '점입가경'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은 미적미적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기회의 땅이자 전복의 희망으로 불릴 정도로 그 땅은 드넓고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지금의 새만금은 갈등의 땅이다. 관할권을 두고 전북의 3개 시군의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km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

관할권 문제는 지난 1991년 방조제를 두고 시작됐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김제시는 현재 시군 경계를 이루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 부안군은 생활권과 지역 균형 발전에 따라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그 갈등은 격화됐다.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대법원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신흥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수변도시, 새만금 남북도로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안전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군산시는 이

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지난 22일 군산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방증한다. 이날 집회는 새만금 신흥만의 운영권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를 향해 신흥만 운영 '원포트'(One-Port) 체계를 공식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군산시의 요구는 '항만'만 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보여진다. 특히 군산시가 신흥만 운영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신흥만 매립 이후 관할권 다툼

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관할권은 매립예정지 아니라 매립된 이후 그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흥만은 올해 준공을 시작해 2026년 개항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수변도시 관할권을 놓고 부안군도 관할권 분쟁에 본격 참전했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점을 미뤄볼 때 부안군은 수변도시 관할권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지역간 대립 속 새만금 SOC와 발전을 위한 특별자치단체(특자체) 출범은 여전히 담보상대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이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별도 특별자치단체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단체장 역할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

으로 운영한다. 행정통합이 아닌 지자체 간의 연합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권역의 국가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생발전과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새만금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는 출범을 미루고 관할권 문제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난처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특자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3개 시군 단체장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주 전주를 지역위원회 제1기 민주정치학교 개강

더불어민주당 전주를 지역위원회(위원장 이성운 국회의원)가 지난 22일 제1기 민주정치학교 개강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월 8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전주시(을) 지역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치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공의식을 높이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기 민주정치학교는 '대한민국, 전북 그리고 청년!'이라는 주제로 내란과 대한민국, 지역의 문화에너지 강화, 청년 정치 등 세부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강식에는 국회 탄핵추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운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사건'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운 의원은 "민주정치학교는 정치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추고, 정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청년,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면서 "12.3 윤석열 내란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요즘 민주정치학교가 올바른 정치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1기를 시작으로 민주정치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소통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반려동물 유기 처벌 대폭 강화

민주 이춘석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명을 돌파하였으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 건수는 매년 1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혹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실·유기된 반려동물의 보호시설 대부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보호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들은



결국 안락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공공 보호소에조차 적정보호 두수 유지를 위해 보호 중인 유기동물 대량 안락사가 이뤄졌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들이 야생화되어 주민과 어린이를 공격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사고는 광견병, 파상풍,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맹견을 유기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이 아닌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만호 기자

노후주택 보수·개량 비용 보조 가능

민주 신영대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노후주택의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 주택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보수 및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재난 피해 입은 농어민 지원 확대

민주 윤준병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 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과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20여 명이 24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인종차별 행위를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도내 노동단체들 “군산대 산학협력단 인종차별 규탄”

단체 측 “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차별… 공공기관 운영 자력 없다”

군산대 산학협력단 측 “회견 당사자 정규직… 수당지급 대상 아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유형봉 본부장)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본부장 이민경) 소속 조합원과 오은미(진보당·순창)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20여 명이 2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인종차별 행위를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탄핵의 여파로 국민들의 마음이 심란한 가운데, 공공기관인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인 왕○○ 씨는 마이크를 잡고 “사회적 약자와 다문화 가정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오히려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기본권을,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왕 씨에 따르면, 중국에서 귀화한 직원 2명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의 직무수령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식 지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지 않은 것은 인종차별이자 인권 유린이며,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조항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군산대 산학협력단은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이주여성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인종차별 규탄 △인권 유린 중단 촉구 △군산대 산학협력단의 공공기관 수탁 운영 자력 박탈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군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책임 촉구 등의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끝으로 오은미 도의원은 “군산시가 종신포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종 차별, 노조 혐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규정한 지침대로 제 수당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대 산학협력단 센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센터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며,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인건비 지급 지침에 의하면 지자체와 센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고, 이번엔 기자회견을 한 왕○○씨의 경우 현재 정규직 직원으로 다른 정규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 대상인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외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밝혔으며, “특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센터장에 대한 인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운영 예산도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되지 않고 센터 자체에서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 제기나 개선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24일, 2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간 진행한 제314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의회는 이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이대로 둘 것인가? 인구영향평가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며, “회기 기간 중 제시된 의원님들의 제안과 건의문이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홍보활동 나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사진)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거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청구권자는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되며, 남원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인 1,344명(2025년 기준)의 연대 서명으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남원시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 청사 전광판 송출 △의회 SNS 채널 등을 연계 △의정소식지,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등의 홍보물을 제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비 집행 과도해”

도의회 의원들 5분 발언… “학교체육 활성화 등 위한 대책 절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1일 제416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진형석 의원 “도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비 집행 과도해”

먼저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진형석 의원(전주2)은 올해 3년차 맞는 고향사랑기부, 전북자치도가 기금사업 발굴은 미진하고 홍보비 집행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진형석 의원(전주2)은 지난 21일 제41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공감하는 지역주민 복리를 위



진형석 의원



강동화 의원

해 쓰여야 한다”면서 “다양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분발과 홍보비용 감축 노력”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 학교체육 활성화 등

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

강동화 의원(전주8)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육성 종목의 다양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및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학교에서 입시 위주가 아닌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지·덕·체를 중시하는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체육교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육현장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북의 낙후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고 전문 체육지도자 육성과 종목별 순회교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